

전남도, 중동발 위기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6천억 규모... 긴급 자금·특별보증·수출 물류 지원 확대 석유류 최고가격 위반·매점매석 의심 신고센터 운영도

전라남도는 중동발 대외 여건 악화로 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4천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중동사태로 수출입 차질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운영한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분별지역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과 함께 2.5%포인트 이차보전(이자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대출이자의 3~3.5%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존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동사태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도 시행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부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과 연계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석유판매액 최고액

제한'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조치에 따라 도와 22개 시군 물가부서에 특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에서는 석유류 최고가격 위반이나 매점매석 의심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긴급 지원대책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 경제의 회복력과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농어촌공 전남, '전국 최대' 어촌뉴딜3.0 참여

155개 지구 지역개발 본격화... 주민 삶의 질 향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는 올해 전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총 1,50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본부는 17일 영암 달마지복지센터에서 '지역개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155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고도화 방안과 2026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현장 관리 교육을 통해 시설물 품질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남본부는 올해 정부의 '어촌뉴딜 3.0' 사업에 전국 최대 규모로 참여(어수, 무안, 고흥 등)하여 전남만의 어촌 자원을 활용한 특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하는 지방소멸대응사업과 저수지 수변개발 등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어촌 지역개발은 주민에게는 살기 좋은 환경을, 도시민에게는 매력적인 휴양 공간을 제공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전남의 특색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해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광산구에 최고명품쌀 생산단지 만든다

삼도·본량 22농가 50ha 시범 단지화... 2년간 4억원 투입 체계적인 재배관리·공동 생산체계 구축해 명품 브랜드화 농업기술센터, 18일 재배기술 교육 및 사업 설명회 가저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광주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명품 브랜드 쌀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산구 삼도·본량지역을 중심으로 50ha 규모의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22개 농가가 참여해 단지화 기반의 체계적인 재배·관리와 공동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억원(시비 80%, 자부담 20%)을 투입한다.

재배 품종은 국내 육성 최고품질 벼인 '조명1호'와 '영호진미'를 중심으로 한다. 생산·수매·유통이 연계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광주통합RPC)과 지역 농협이 함께 참여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타 지역 벤치마킹, 사업 대상자 선정·도양 검증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을 통해 ▲도양검정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시비관리 ▲생육 단계별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속, 최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



산된 쌀은 광주통합RPC과 연계해 유통·판매하고 명품 브랜드화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18일 센터에서 참여 농업인과 농협, 광주통합RPC, 육묘장 관계자 등 30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 교육과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기술 ▲품종별 재배 특성 및 관리 요령 ▲종자 소독과 육묘 관리 ▲물 관리와 시비 관리 ▲병해충 관리 등 핵심 재배 기술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광주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화를 추진하겠다"며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소규모 밀착 안전망'으로 중대재해 근절

국비 6억 확보... 광주형 안심일터 표준모델 마련 제조업엔 '안전길잡이'·건설엔 '안전기동대' 운영 맞춤형 보호구·상담·기술지도 등 현장 밀착 지원

광주시가 소규모 제조업 현장에 '안전길잡이'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건설현장에는 '안전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공모사업에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산업현장의 특성과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광주시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지원 아래 사업을 추진하며, 소규모 제조업체와 영세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보호구를 보급하는 한편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지도와 현장 맞춤형 상담(컨설팅) 등을 병행해 개별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건설 안전기동대 운영 사업'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안전시설물과 보호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 밀착 맞춤형 기술 지도를 실시하는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쳐 사고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운영은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맡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광주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망을 완성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대재해 예방의 빈틈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사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광주형 안심일터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 산업현장 전반에 우수 사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역 산업현장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까지 체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 기자

광주시, '소상공인 상생보험' 무상 가입 지원

금융위·보험업권과 업무협약 체결... 3년간 20억 투입 사고·대출 리스크 보장 등 경영위기 대비 안전망 구축

형으로 운영된다. 손해보험은 소상공인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보장하고, 생명보험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보험업권과 실무 협의를 통해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신청 절차 등을 구체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상생보험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험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권-지자체 상생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신종팔 기자

☎062-525-9775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